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일본 반원전 운동과 대규모 시위의 부활

신경립*

요 약

이 논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운동으로서의 시위가 극도로 위축돼 있던 일본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시위가 부활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1960~70년대 이래 수십 년 간의 침묵을 깨고 시위가 활성화한 데는 무엇보다도 지난 수 년 사이 급변한 일본의 미디어환경이 주요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다. 과거 일본 사회에서는 신문과 방송 등 전통 미디어가 시위활동에 부정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시위 확산을 가로막아 왔다. 그러나 반원전 시위가 발발한 2011년을 전후하여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정보 확산과 소통의 매개로 자리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가 전통 미디어의 기능을 대체, 보완함으로써 사회운동에 대해 열린 담론적 기회를 형성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들을 거리로 불러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전개된 대규모 시위는 원전 이슈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이슈에 대한 시위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주제어: 반원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대규모 시위, 미디어 환경, 담론적 기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sesame73@nate.com

I. 서론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사회는 크게 뒤바뀌었다. 불식간에 삶의 터전을 앗아간 재앙과 체르노빌 사고 이후 최악의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은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불안과 불신감을 심어 놓았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는 물론 일본 전역이 방사능 공포에 시달리면서 원전 재가동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사고 후 3년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다.

3.11 이후 달라진 일본 사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특히 큰 주목을 끈 변화는 사고 후 수 년이 지나도록 지속된 반원전 시위다. 지난 수십 년 간 좀처럼 거리로 나서는 일 없이 정부 정책에 순응해 온 일본인들이 수만 명에서 수십 만 명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모여 정부의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달라진 일본 시민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2차대전 패전 후 일본 사회에서는 학생운동과 노조 쟁의, 민주 단체의 활동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특히 1960년 일미안전보장조약 개정에 반발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안보투쟁과 그 뒤로 이어진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맹(베헤렌)’의 반전 평화시위를 거치면서 일본에서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시위가 크게 활성화됐다(한영혜 2004).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러 시위가 점차 격렬해지고 폭력화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잃자 일본의 사회운동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의 사회운동은 정부 정책을 정면에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시위활동보다는 정부와의 원활한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주도 하에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는, 일종의 ‘생활운동’으로 자리잡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정진성 2001).

정부와 대립하기보다는 협력과 순응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 온 일본 시민사회는 그러나 2011년 3월 이후 달라졌다. 반원전·탈원전 시위는 사고 이후 점차 고조돼 2012년 6월에는 시위 참가자 수가 20만명에 달했으며,

2012년 3월 이후로 매주 금요일마다 도쿄의 총리관저 앞에서 반원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 좀처럼 보기 드물었던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는 어떻게 되살아나게 되었는가?

이는 지난해 일본 내 반원전 시위 규모가 눈에 띄게 불어나면서 꾸준히 제기됐던 질문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러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는 고용을 희생시키는 신자유주의 경제에 분노한 젊은이들이 고도 경제성장의 상징이기도 한 원전 사고를 계기로 사회 정의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구조주의적 입장부터, 폭력을 배제한 축제와 같은 시위 형태가 일본인들을 불러 모았다는 주장이 있다. 또 초유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초래한 사회적 쇼크와 같은 Frame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정보 공유가 제한적인 원전문제라는 특성상 정권의 Openness 정도에 따른 정치적 기회구조에서 반원전 운동 형성 및 성패 원인을 찾는 이론도 제기됐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 설명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지난 수 년 사이 급변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주목한다. 대중들이 매스미디어에서 걸러진 정보에만 의존해야 했던 과거에는 일본 내 시위활동이 주요 언론에서 거의 취급되지 못함으로써 규모의 확대나 전국으로의 확산, 지속성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후쿠시마 반원전 시위에 대해서도 해외 언론들이 일찌감치 높은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과 달리, 일본 내에서는 일부 진보적 언론을 제외하면 시위 규모가 절정으로 치닫기 전까지 시위 관련 보도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언론의 무관심이나 부정적 시각이 시위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됐던 과거와 달리, 2011년에 형성된 반원전 시위는 일본 사회에서 빠르게 활성화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를 비롯한 UCC 등 새로운 미디어의 과급력에 힘입어 지난 수십 년 간 볼 수 없던 규모로 불어났다. 정보 확산과 소통의 매개로 자리잡은 새로운 미디어가 기존 언론의 기능을 대체, 보완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들을 전국 단위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펴기 위해 우선 II장에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 전개되는 대규모 시위가 지난 수십 년간의 지역적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소규모 시위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형성, 발전된 원인을 설명하는 대안 가설들을 살펴보고, 본고가 독립변수로 지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가 사회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 IV장에서 2011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그러한 변화가 과거 시위활동과는 무관하게 살아 온 일본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모으는 데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검증할 것이다.

II. ‘시위 없는 나라’의 종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채 안된 2011년 3월 20일, 일본 도쿄의 한복판인 시부야에 1,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모여 반원전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후 시위의 불길은 빠르게 번져 한 달 뒤인 4월 10일에는 도쿄 외에 삿포로, 도야마, 가마쿠라, 나고야, 교토, 구마모토, 오키나와 등 전국 각지에서 반원전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특히 이날 도쿄 고엔지에는 20~30대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인 1만 5,000명(이하 주최측 발표 기준)의 시위 참여자들이 집결했다. 2011년 6월 시위대 규모는 6만~8만명까지 불어났다.

동일본대지진의 충격이 진정되면서 점차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됐던 시위는 해를 넘기면서 아예 정례화된 운동으로 발전하며 세를 확대했다. 수도권에서 반원전 시위활동을 벌이는 집단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

적인 '수도권반원전연합'¹⁾은 기존의 산발적인 시위에서 벗어나 2012년 3월 이후 도쿄 나가타초의 총리관저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반원전 집회를 주최하기 시작했다. 2012년 3월 29일 300명의 인원으로 시작된 총리관저 앞 시위 참가자는 3개월 뒤인 6월 29일 주최측 추산으로 15만~20만 명에 이르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해 7월 16일과 27일에도 각각 17만~20만 명이 일본의 관가인 나가타초와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메웠다.²⁾

지난 수십 년간 볼 수 없던 대규모 시위가 도쿄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진 현상은 우선 해외 언론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위 참가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보도에 인색하던 일본 언론들도 이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상을 뒤흔든 원전사고의 파장을 고려할 때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 상정 가능한 일이다. 수십 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 역시 국제적으로 아주 드문 사례는 아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도쿄 도심 한복판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대규모 시위를 보기 어려웠던 일본에서 벌어진 이러한 현상은 기존 질서에 순응해 온 일본 시민 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에서는 폭력사태로 귀결된 1960~1970년대 안보투쟁과 학생운동, 반전운동 등 일련의 사회운동이 여론의 외면과 정부의 규제 강화 속에 잠잠해진 이후로는 대규모 시위형태의 사회운동을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회 체제나 정부 정책을 문제삼는 집단 행동을 볼 수 없는 조용한 시기가 수십 년 간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순응이 갈등보다 화합을,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고 위계나 서열을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한경구 2000, 53-55). 그

1) 2011년 9월에 출범한 반원전 조직과 개인들의 연합체로, 2014년 1월10일 현재 12개 반원전 단체와 개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2) 시위대 규모는 아사히신문이 주최측 발표 기준으로 보도한 수치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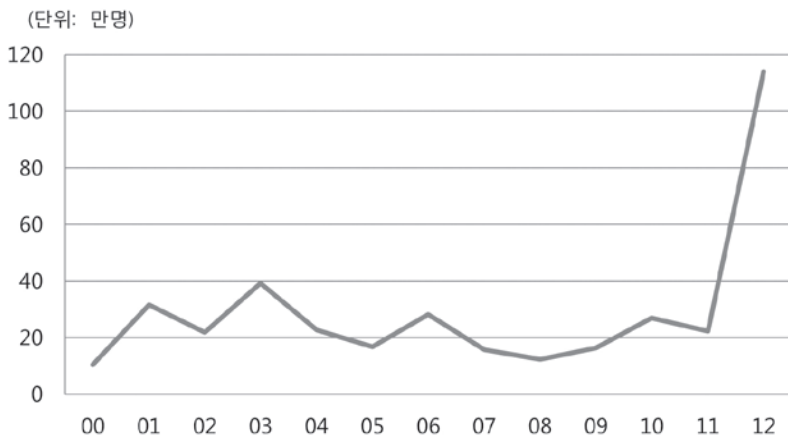
러나 전후 상당기간 일본은 폭력까지도 동반하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활동이 왕성한 사회였다. 1950년대 노동운동에서 1960년대 학생운동과 베트남 전 반대운동, 1970년대 반공해 주민운동과 여성운동 등은 사회 전체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다(이시재 1995, 208). 특히 1960년대부터 1970년대는 참가자 수나 발생건수, 격렬성이라는 면에서도 일본의 시위활동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그러나 극심한 폭력성과 그 이미지가 족쇄가 되어 시위 형태의 사회운동은 이후 수십 년 간의 침체기를 맞게 된다(마쓰이 2012, 136, 151).

물론 시위가 위축된 이후에도 사회운동은 형태를 달리하여 전개되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사회운동은 과거의 저항적 성격이 사라지면서 시민-지자체-중앙정부가 연대하는 지역활성화 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정진성 2001). 그러나 기존 질서에 도전하며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본인들은 최근까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2003년 이라크전 반대 시위와 2007년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에 각각 4만~5만명이 참가하면서 한때 일본에서의 시위 부활 여부가 주목을 받기도 했으나, 이 역시 규모와 지속성, 사회적 인식이라는 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이처럼 조용한 사회 분위기가 지속된 가운데 2011년부터 들끓기 시작한 전국적인 반원전 시위는 지난 수십 년간 볼 수 없던 매우 낮은 광경이었다.

2011년을 기점으로 한 시위 활동의 이례성은 그 이전과 이후 시위 참가자 수를 비교하면 명백해진다. 일본 호세이대학 오하라사회문제연구소(大原社会問題研究所)의 사회노동운동 대연표³⁾를 통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시위 참가자 수를 집계한 결과, 2000년의 전국 시위 참가자 수는 한 해를 통틀어 10만 명이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미국의 이라크전 참전에 반대해 전세계적인 반전운동이 벌어졌던 2003년 당시에도 연간 시위 참가

3) 수치는 대연표 가운데 집회 or 시위(데모), or 항의를 키워드로 지정해 검색된 사례들 가운데 시위 참가자 규모가 명시된 경우의 합을 집계한 것이다.

〈그림 1〉 일본 내 시위 참가자 수



자는 40만 명에 못 미쳤다. 개별 시위의 참가 인원은 가장 많았을 때도 5만 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촉발된 반원전 시위는 그 규모 면에서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최대 참가 인원이 6만 명 정도였던 반원전 시위는 2012년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확대돼 단 한 번의 시위에 20만 명이 운집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최측 발표가 기준이 되는 이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위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에 담긴 엄청난 인파는 과거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광경을 보여준다. 후쿠시마 사고 발생 이전까지 일본에서 벌어진 반원전 시위로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의 2만 명이 최대 규모였다(東洋經濟 11/07/14).

수십 만 명이 참가한 초대형 시위를 비롯해 크고 작은 반원전 시위가 매 주마다 벌어진 2012년의 시위 참가 인원은 총 114만명에 육박했다. 특히 그 해 7월 한 달 동안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61만 명을 넘어섰다. 위 그림은 사회노동운동 대연표에 명시된 시위나 집회 참가인원 수를 연도별로 집계해 작성한 것이다. 다만 비교적 최근인 2012년의 수치는 아직 대연표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시위 관련 뉴스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는 일본의 진보

계열 신문인 아사히신문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별도 집계했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시위 내역을 비교적 상세히 담은 대연표와 달리 도쿄에서 진행된 반원전 시위 외에는 거의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제약을 감안할 때, 2012년의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1960~1970년대 이후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보기 드물었던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된 반원전 시위는 해외 언론은 물론 일본인들 스스로에게도 큰 놀라움을 안겨 주는 사건이었다. 초반에는 반원전 시위에 대해 극히 제한적 보도에 그쳤던 일본 언론들도 참가자 수가 수만 명을 웃돌며 사회적으로 파급력을 키워가자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만은 없게 됐다. 학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기만 하던 일본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데 주목하며, 반원전 시위가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일본의 보수적 시민사회의 지형을 바꾸어 놓을 ‘풀뿌리 다이내미즘(Grassroots Dynamism)’”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한다(Ogawa 2013, 325).

그렇다면 수십년 간 지속된 일본의 조용한 사회 분위기를 깨고 반원전 시위가 대규모로 발생,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는 일본 반원전 시위의 형성 및 확대 이유를 설명하는 기존 문헌의 이론들과 그 한계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III. 일본 반원전 시위 확대에 대한 이론적 검토

2011년 이후 일본 반원전 시위가 확대되면서 학계와 언론은 안보투쟁 이후 이렇다 할 동향이 없던 일본에서 사회운동이 새롭게 일기 시작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속속 등장했다.

우선 일본 반원전 운동이 확대된 원인을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와 디플레이션을 장기화에서 찾는 분석이 있다. 이러한 분석은 반원전 운동이 지금까지 시위에 참가해본 적 없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확산됐다는 점에 주목

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와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이 초래한 비정규직 확대와 빈부격차 등의 현상이 지금까지 사회운동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 세대의 불만을 분출시켰다는 주장을 펴는다. 200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도입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중산층 붕괴와 계약직·실업자 급증 등 고용 불안정에 희생된 젊은 층이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에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때 원전은 안전한 생활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경제질서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Ogawa 2013).

이 주장에 따르면 평일인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 또한 일본의 경제적 현실과 무관치 않다. 과거 고성장 저실업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느라 사회적 이슈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거나 참여할 시간을 내지 못했던 일본의 대다수 중산층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서 시위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즉, 장기 디플레이션 구조에서 안정된 일자리, 넉넉한 경제력과 함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일본인들이 시위 형성 및 확산의 동력이 됐다는 것이 이러한 분석의 요지다(Hagi 2012).

실제로 한 조사 결과 2011년 6월 11일 열린 시위 참가자 가운데 48%는 생전 처음으로 집회 활동에 참가한 이들로, 40~50%는 30대 이하의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平林 2011). 또 시위 동조자들의 블로그나 온라인 매체에 공개된 반원전 시위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 자료에는 ‘원전 가동 반대’라는 주장과 함께 ‘실업반대’, ‘비정규직제도 철폐’, ‘1%의 자본가 타도’ 등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좌파 세력의 조직적인 활동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거 프리터 등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일본의 젊은 이들이 차별과 격차 해소 등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장하며 주도했던 시위가 산발적인 소규모 활동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크게 약화된다. 일용직과 파견직 근로자, 저임금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젊은 프리터들이 2004년부터 매년 노동절을 앞두고 주최한 시위 참가자는 초기 수십

명 단위에서 2007년 300명, 2010년 350명(추측 발표 기준)으로 사회의 주목을 받을 만큼 확대되지 못했다. 2011년에는 미국의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 시위에서 촉발된 ‘점령(Occupy)’ 시위가 자본주의 세력과 글로벌화에 대한 반발, 빈부 격차에 대한 분노 등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전세계로 번져갔지만, 당시 ‘Occupy Tokyo’ 참가자는 200명 안팎에 그쳤다(연합뉴스 11/10/16).

시위의 형식, 즉 레퍼토리(Repertoires)에 주목하는 분석은 2011년 이후 일본 반원전 시위가 형성, 확산된 원인을 새로운 시위 방식에서 찾는다. 이러한 분석은 종전의 시위와는 다른 방식의 집단 행동을 통해 요구나 주장을 표현하는 새로운 Repertoires가 시위를 고조시킨다는 이론에 따라(Tarrow 2011), 일본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일반 대중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위 양식에서 찾는다. 2000년대 들어 도입되기 시작한 ‘사운드 데모’⁴⁾ 등 축제 스타일로 진행되는 새로운 시위 방식이 “불안정한 사회적 조건을 정치적 변화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문화적 실천 형식”으로 작용했으며, 이 장치가 폭력적 이미지가 강했던 시위를 축제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기존의 시위를 비롯한 사회운동에 거부감을 느꼈던 일반인들까지도 움직였다는 것이다(박지환 2012a).

이러한 설명은 일부 일본 언론들의 분석 보도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폭력사태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1960년대 안보투쟁과 반전시위가 대중의 외면을 받으면서 시위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백안시된 것과 달리, 2011년 이후 반원전 시위는 그에 필적하는 규모로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질서정연함과 음악·퍼포먼스 등을 접목한 ‘여흥’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덕에 여성을 포함한 “보통 사람들”은 물론 가족 단위의 시민들까지도 부담 없이 시위장으로 향하게끔 했다는 것이다(東洋經濟 12/08/16). 실제로 2012년 3월 이후 금요일마다 총리관저 앞에서 열린 반원전 시위는 저녁

4) DJ부스나 스피커를 실은 트럭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행진하는 시위 형태.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2시간 동안만 집회를 가진 뒤 해산한다. 수도권반원전연합은 공산당이나 노동조합과의 연루, 시위의 정치화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감안해 시위 현장에서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깃발이나 전단지 배포도 금지했다.

그러나 시위문화, 특히 Repertoires에 초점을 두는 이러한 분석은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시위 형태가 도입된 이후로도 한참 동안 시위 확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리적 한계를 지닌다. 2003년 이라크전 반대 시위나 2007년을 전후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등이 모두 재미를 추구하는 비폭력 시위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지적이고 단발적인 이벤트에 그쳤을 뿐이다. 또한 반원전 시위가 비폭력성과 대중의 참가 유도를 위한 오락성을 강조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도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참가자 체포가 꾸준히 이뤄졌다는 점에서 반원전 시위의 레퍼토리가 시위 행위를 부담 없이 즐기는 ‘축제’로 변모시켰다는 주장은 논리의 벽에 부딪친다.

세 번째로, 반원전 시위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방사능 유출이라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가 초래하는 정서적 충격이 불특정 다수를 동원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됐다는 이론도 일본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후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집결하여 일으키는 대규모 시위의 원동력은 사고 이후 새롭게 형성된 원전에 대한 정서나 인식, 사고의 틀, 즉 Frame이 된다(Jasper 외 1995). 대형 사고 이후 사회 구성원들을 강타한 충격과 그로 인해 원전에 대해 갖게 된 인식의 변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원전 가동을 막아야 된다는 절박감으로 인해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소극적이던 일본 대중이 거리로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시위의 동력으로서의 사고 틀은 시위 현장의 구호와 피켓에 적힌 문구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반원전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에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근거로 “원전은 인류와 공존할 수 없다”, “원전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전 사고가 한 번 더 일어나면 일본은 망한다” 등 원전에 대한 공포감과 사고로 인한 충격을 드러낸다(埼玉新聞 13/11/25).

원전 사고의 충격과 그 파장에 대한 공포가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는 힘이 됐다는 심리적, 정서적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수십 만명에 달하는 시위의 규모와 그 지속성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본 사회에 미쳤을 충격의 크기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간과할 수 없는 모순과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의 반원전 시위가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가장 컸을 2011년에는 반원전 시위 참가자가 최대 6만명(9월 19일)에 그쳤으나, 이듬해인 2012년에 당시 집권 민주당 정부가 원전 재가동 방침을 밝힌 이후 시위 참가는 급격히 늘어나 6~7월에는 최대 20만 명에 달했다. 2012년의 급격한 시위 고조는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 가운데 일부를 재가동시킨 시기를 전후해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대해 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충격이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처음 재가동 방침을 밝힌 4월 13일 직후에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서적 원인으로만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정서적 원인을 독립변수로 삼는 분석의 한계는 해외 반원전 운동과의 비교에서도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3~4월에 세계 각지에서 열린 반원전 시위 규모를 살펴보면 독일이 25만 명, 스위스도 2만 명에 달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도쿄 고엔지에서 열린 시위가 최대 1만 5,000명을 동원하는 데 그친 점을 볼 때, 사고의 정서적 충격이 시위를 일으키고 확대시키는 독립변수가 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마지막으로 반원전운동이나 환경운동의 형성과 성패 여부를 정치적 기회(Political Opportunities), 특히 국가 레짐의 특성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분석이 있다(Kitschelt 1986; Joppke 1992). 정치적 기회구조는 사람들이 집결하고, 어떤 형태의 사회운동 레퍼토리를 선택할지 결정하게 하는 기본적인 틀이다(Tilly 외 2007). 이처럼 정치적 기회구조에서 반원전 운동 형성 및 확대의 동인을 찾는 이론가들은 정치 체제가 열려있고(Open) 민주적인지, 또는 닫혀

있고(Closed) 억압적인지 여부를 반원전 운동의 양상을 결정짓는 독립변수로 상정한다.

서구 민주국가들의 정치적 기회구조에 따른 반원전 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과를 분석한 키철틸트(Kitschelt 1986)는 정치적 기회구조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선거 정치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갖는 정당 수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입법부의 정책 발전 및 통제능력, 이해단체와 행정부처간 다원주의적 관계, 새로운 수요가 정책 형성 과정에 접근할 기회 등 4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치적 기회가 열려 있는 국가에서는 로비나 탄원, 법적 소송과 같은 동화적인 전략(Assimilative Strategies)이 주로 구사되는 반면, 정치 체제 내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구조가 닫혀 있는 국가에서는 제도권을 벗어나 시위와 같은 충돌적 전략(Confrontational Strategies)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는 한 국가 안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 체제 안에 독립적인 권력 주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새로운 행위자들에게도 권력에 대한 접근기회가 열려 있고, 지배권력의 연합이 불안정하고, 사회운동이 영향력 있는 동맹이나 지지세력을 확보한 경우, 레짐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강한 탄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치적 기회가 열리면서 체제 내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목소리가 활발하게 일 수 있다. 반면 보다 억압적이고 닫힌 체제에서는 국가 권력과 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그에 상반되는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비용을 감안해 억제돼 있던 불만이 끝내 충돌적인 저항으로 분출되고 만다. 이처럼 상반되는 기회구조는 한 국가에서도 레짐의 특성이 달라지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Tilly 외 2007).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는 2011년을 전후한 일본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일본은 민주 체제이면서도 1955년 이래 보수 자민당이 탄탄한 권력기반 하에 일당 지배를 유지해 온, 정치적 기회 구조가 상대적으로 닫혀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

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면서 정치적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전에 없던 강력한 야당(자민당)의 존재와 지배권력인 민주당의 불안정한 정치적 기반, 취약한 정책 집행능력 등 불안 요인으로 가득한 데다 자민당과 달리 원전 폐지로 돌아설 가능성도 엿보이는⁵⁾ 민주당 정권 하에서 원전에 반대하는 일본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기회를 발견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실제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는 일본 사회운동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1960년대 환경운동에 있어서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부터 미나마타병 등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인한 공해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초반까지는 눈에 띄는 환경운동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1970년대 초반까지 대규모 시위를 포함하는 왕성한 환경운동이 전개되면서 정부 환경정책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이른다. 알마이다 등(Almeida외 1998)에 따르면 이는 정부 부처간 갈등을 비롯한 엘리트층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지역 단체나 야당(공산당)을 비롯해 운동세력에 대한 외부 지원이 확충됨으로써 정치적 기회가 열린 영향이 컸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 환경운동이 위축된 것 역시 정치적 기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다. 1974년 이후 정부가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여 단합된 행동을 취하면서 정치적 기회가 닫히자 반공해운동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레짐의 특성에 따른 정치적 기회 구조를 시위 발생 및 확산의 독립 변수로 지목하는 분석은 일견 일본의 반원전 시위 형성 과정과 맞아떨어지는 유력한 대안 가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 정권 몰락 후 자민당 재집권기에도 시위 전개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5)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민주당)는 2011년 7월13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탈원전으로의 정책 전환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2012년 6~7월에 최고조에 달한 반원전 시위는 자민당의 아베 신조 정권 하의 2014년 1월 현재 급격하게 위축된 상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위 약화가 민주당 정권 불안이 극에 달했던 2012년 하반기부터 이미 급진전된 현상이었다는 점이다.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매주 실시되는 시위 참가자 규모는 정권 교체 이전에 이미 1,000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였다. 2013년 자민당 정권에서 수백 명 단위로 더욱 줄어들긴 했지만 이는 정치적 기회 구조의 변화가 초래한 현상이라기 보다 자연스러운 시위 약화 과정(Demobilization)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닫힌 정치체제이자 국가 주도적인 정책 추진력을 갖춘 자민당 아베 정권 하에서도 반원전 뿐 아니라 특정비밀보호법 반대, 집단자위권 허용 반대 등 이슈를 달리하여 수만 명 규모의 대형 시위가 빈발하는 점을 미루어, 레짐의 특성에 주안점을 둔 정치적 기회 구조 이론은 강한 근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는 이처럼 논리적 한계를 안고 있는 기존의 여러 이론적 시도를 대신하여 일본의 대규모 반원전 시위가 형성, 발전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일본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주목한다.

여기서 미디어 환경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본고의 독립변수가 어떤 특정 형태의 미디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류 언론과 인터넷 이용의 확산,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급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일본의 탈원전 시위를 일으킨 독립 변수로서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정보 수집 매개로서의 인터넷 확산에 따른 기존 방송 및 신문 매체의 영향력 감소, 전통 언론과 달리 다양한 정보를 시민사회에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의 증가, 특히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보급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이용 확대 등의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괄적 환경 변화가 초래하는 영향 중에서 본고는 담론적 기회구조의 변화에 특히 주목한다. 즉, “이슈나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판단에 근거를 제공” 하는 의미로서의 담론(오현철 2004)이 사회운동이나 시위의 정서적, 인지적 틀을 설정하여 운동 참가자들

을 동원하는 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일본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담론적 기회구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가 시위 문화를 부활시키는 데 어떻게 작용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미디어가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기회구조 이론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지만, 어디까지나 외부 조건으로서 주변적인 변수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불만을 공론화하는 기재인 미디어는 담론적 기회(Discursive Opportunities)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운동 참가자를 동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역할에 관심을 보인 갠슨(Gamson 2004, 24)은 담론이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양한 미디어가 제공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델라포르타 등(Della Porta 외 2006, 220)도 담론적 기회는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출하는 미디어의 역할과 연계돼 있다고 지적한다. 즉,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어떻게 비쳐지느냐에 따라 특정 사회운동이 내세우는 주장이나 요구가 타당하다고 동조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도, 비합리적인 것으로 매도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뉴미디어는 이러한 종전의 외에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들을 인터넷상에서 조직화, 네트워크화하는 매개로 작용함으로써 조직에 소속되지 않는 개인들까지도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됐다(Della Porta 외 2006, 133).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전혀 연결돼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Shirky 2008).

미디어 환경의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활성화가 사회운동에 보다 많은 대중을 짧은 시간에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운동 조직이 중심이 되어 개인적 인맥을 활용해 활동가들을 동원했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인터넷과 소

설미디어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 미디어는 1대 불특정 다수의 정보 전달은 물론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무수한 개인들을 연결시키는 조직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Bennett 외 2012; Earl 외 2011; Shirky 2008).

얼 등(Earl 외 2011)은 인터넷에 기반한 기술이 단순히 시위 규모를 불리거나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일어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는 과급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웹 활용이 조직과 참여에 드는 거래비용을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집단행동이나 사회 운동에 대한 개인들의 참여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 지목했다.

또 베넷 등(Bennett 외 2012)은 회원제 조직의 주도 하에 전통적인 동원 방식으로 전개됐던 과거의 시위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개인들이 집결하여 이뤄지는 집단행동은 보다 단시일 내에 고조되어 보다 큰 규모의, 때로는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하는 대단위 시위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전통적 조직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훨씬 손쉽고 적은 거래비용으로 회원들이나 지지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디지털 미디어가 시위를 조직해 온 운동 단체들의 역할 자체를 대신하여 정치적으로 개인화된 사람들을 집결시키고 행동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화와 함께 개인화된 성향이 강해지면서 개인보다는 조직의 논리를 앞세우는 공식 단체에 소속되기를 갈수록 꺼리는 비(非)활동가들이 포괄적인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집단 행동까지도 일으키게 되는 데는 ‘네트워크 에이전트’로서의 디지털 미디어,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디지털화된 뉴미디어가 보다 개방적인 담론적 기회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셔키(Shirky 2008)는 휴대폰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등장함으로써 누구나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통해 매스미디어의 특징인 ‘병목현상’을 제거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즉 정보전달 채널이 다

양화하면 과거 매스 미디어가 매체의 특성상 취급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즉석에서 토론의 장이 열릴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불특정 다수와의 상호 연계와 소통이 가능해진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사회 이슈에 대한 군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하며,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모이지 않고도 집단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의 이슬람 독재국가에서 불길처럼 확산된 ‘아랍의 봄’의 열기 역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전까지 볼 수 없던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랍의 봄의 성패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철통 같던 독재국가에서 연쇄적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형성되고 각국으로 번져간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들의 네트워크화의 중요성은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분석된다(Herdagdelen 외 2013; Hussain 외 2013).

또 한가지, 일본의 반원전 시위를 연구함에 있어 주목할만한 이론은 인터넷이 과거 정치적으로 비(非)활동적이던 시민들을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Mercea 2012). 불레인(Boulianne 2009)은 인터넷이 시위를 비롯한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38건의 연구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인터넷이 시민사회 형성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소개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의 편의성은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활동에 보다 쉽게 발을 디딜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과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 접근성의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았던 요인들은 사라지고 있다.

사회운동, 특히 본고가 다루는 시위활동의 전개에 있어 뉴미디어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학자들과는 상반된 분석도 적지 않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사회운동에 있어 인터넷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프라인과 동떨어진 온라인상의 활동은 충분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레스터(Lester 2009)는 환경운동에 관한 연구에서 뉴미디어의 부상과 함께 전통 미디어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존 미디어 권력의 역할이 완전히 뉴미디어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뉴미디어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매스 미디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뉴미디어를 토대로 하는 시위 활동은 기존 미디어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뉴스 매체의 지배력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올로루니스올 등(Olorunnisola 외 2012)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뉴미디어 기술의 영향력에 두 가지 상반된 접근 방법이 있다는 점을 소개한다.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인터넷이 전통 매스미디어를 대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뉴미디어 기술이 자동적으로 사회운동의 확산과 성공을 이끈다는 이른바 기술결정론을 경계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운동의 파급 효과는 온라인상에서만 전개되는 활동에 국한될 때보다는 오프라인의 전통적인 시위 활동이 동반되고 정보전달 효과가 강한 매스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보도될 때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역할을 매스 미디어에 노출되기 위한 중간 통로로 국한시키는 것은 뉴미디어를 지나치게 평가 절하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일본 반원전 시위에 국한해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자면,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원전 폐쇄 시위는 초반 일본의 매스 미디어의 큰 관심을 얻지 못했음에도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도 확산되어 갔다. 일본 언론의 무관심과는 달리 해외 언론들의 높은 관심과 연이은 보도가 반원전 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도출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 매스 미디어의 반응이 일본의 시위 지지세력에게 전달된 것 또한 TV나 신문과 같은 전통 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해외 뉴스사이

트 링크가 개인들의 SNS나 블로그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IV. 일본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대규모 반원전 시위

미디어 환경과 사회운동에 대해 기존에 연구된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가 일본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반원전 시위를 일으키는 데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변모하기 시작한 미디어 환경이 탈원전 시위를 전후하여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으며, 달라진 환경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위에 대해 폐쇄적이던 담론적 기회구조를 열린 구조로 바꿔 놓았다. 즉, 과거 매스미디어가 시위 활동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안 좋은 행위라는 보수적 담론에 일본 사회를 가둬 두었다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보적이고 개방된 담론이 형성되고, 사회 다수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열린 기회구조는 그 동안 침묵을 지켜 온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들로 하여금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상의 공간을 시작으로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온라인 상에서 쌓인 에너지가 마침내 오프라인 상의 대규모 거리 시위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즉,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시위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만드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과거 일본 사회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던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고 확산시키는 동인이 됐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펴기 위해 우선 기존의 일본 미디어 환경과 시위 활동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종종 시위 활동의 불모지로 비유되지만, 폭력 사태로 귀결된 1960~1970년대 이후에도 활동가들이나 지역 시민사회들에 의한 시위는 심심찮게 벌어졌다. 1962년 이후 전개된 나리타 주민들의 국제공항건설 반대 운동, 일명 나리타 투쟁(산리즈카 투쟁)은 1978년 공항이 개항된 이후까지도 수십 년 간 지속됐다. 2000년대 이후에도 이라크전 당시의 반전운동과 고용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시위,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 등이 크고 작은 규모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위들은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얻지 못하는 단발성 시위로 끝나거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산발적인 시위에 그쳤다.

이처럼 시위가 대중의 호응을 얻어 확산되지 못한 데는 폭력 사태로 귀결됐던 과거 사회운동에 대한 부정적 기억 등 여러 원인들이 있으나, 신문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외면 속에 이러한 시위가 대중들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못한 점이 중요한 요인이 됐다. 전통 매스미디어는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퍼뜨려서 소수의 운동가들뿐만 아니라 대중을 운동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Della Porta 외 2006, 167), 미디어가 시위 활동을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할 경우 대중들은 시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시위 활동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 시선을 그대로 답습하기 마련이다.

일본의 경우 시위 활동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보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해마다 세계 정재계 권력을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반대하는 국제적 시위가 벌어지지만,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는 일본의 언론 매체는 일본 공산당 산하 매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다(工藤 2011).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불거진 2010년 당시 4,000명 가량이 참가한 반중 시위나 같은 해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반대 시위 등도 대다수 매체들에 의해 보도되는 일 없이 조용히 묻혔다.

사회운동에 대한 일본 주요 언론들의 편향적 태도는 일본 국내에서도 끊

임없이 지적돼 왔다. 우에스기 다카시 전 자유보도협회 대표는 시위 문화가 정착된 서구와 달리 일본인들이 개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데 소극적인 이유는 매스미디어의 보도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에 거스르는 불온한 무리”라는 관료적 인식하에 시위를 철저히 무시해 온 매스미디어의 보도 태도가 시위 참가자를 백안시하고 자기 주장에 소극적인 일본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것이다(上杉 2010).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볼 때 일본은 사회운동에 대한 담론적 기회구조가 폐쇄된 전형적인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시위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냉담한 태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벌어진 반원전 운동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1년 전세계가 후쿠시마 원전 이슈에 주목하며 일본에서 일기 시작한 반원전 시위를 비중 있게 보도했을 때 정작 일본 언론들은 조용했다. 2012년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총리관저 앞에서 벌어진 반원전 시위를 주도한 수도권반원전연합 측에 따르면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를 비롯해 일본TV, TBS 등 주요 방송국들은 시위 참가자 수가 20만 명에 달한 6월 29일이 돼서야 비로서 적은 비중으로나마 총리관저 앞 시위에 대한 보도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시위 규모가 만 명을 돌파한 6월 22일에도 현장에는 TBS 등 방송국 카메라와 취재 기자의 모습이 보였지만, 이튿날 아사히 신문을 제외한 주요 매체들의 보도는 전무했다(野間 2012, 33, 104-105). 매체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NHK를 필두로 상당수 주요 매체들이 초창기 반원전 시위를 묵살하거나 극히 제한된 보도에 그친 셈이다.

사회운동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 일본의 매스미디어가 지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요한 원인으로는 정부와 밀착된 ‘기자클럽’⁶⁾의 존재가 지목되기도 한다. “거대 미디어 자체가 권력기구와 일체화돼 있다”는 비판(工藤 2011)이 반영하듯, 정부기관과 법원, 경찰, 정당, 주요

6) 약 100개 일간지와 4개 통신사, 40개 방송사로 제한되는 카르텔과 같은 기자단.

경제기구 등 일본의 주요 권력조직 내에 형성된 기자클럽은 권력조직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보도하는, 정부에 의한 “언론 장악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Pak 외 2012).

이처럼 관료와 밀착된 취재 관행으로 인해 일본의 매스미디어는 역사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상대적으로 축소하거나 부정적으로 투사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 왔다. 권력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에 대한 언론의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는 일례는 1960년대까지 비교적 활성화돼 있던 임금투쟁에 관한 당시의 언론 보도다. 가령 1962년부터 시작된 질소미나마타공장에서의 대규모 쟁의(일명 안정임금투쟁)는 당시 전국 단위로 보도되었으나, 내용은 극심한 폭력 사태를 연상시키는 비유와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 지역 경제활동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서의 비난 등에 치중된 것이었다(小林 2011, 32-35).

정보가 거대 미디어와 정부에 집중돼 있던 시대적 여건 속에서 시위 참가자의 주장과 이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보다는 시위 행위의 부정적인 면모만을 부각시키는 보도 태도는 정부 정책이나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담론적 기회를 막는 동시에, 그러한 주장을 펴는 운동은 안정적 질서를 파괴하는 불온한 세력으로 규정짓는 인식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미디어가 사회운동에 대해 구축해 온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담론이 시위에 대한 일본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시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초래하는 데 크게 일조한 셈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회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매체 보도의 영향이 사회운동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을 초래했다기보다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매스미디어의 부정적인 태도를 낳았다는 반대의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 근대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1890년대부터 이미 기자클럽이 형성되기 시작해 1910년 무렵에는 모든 정부 부처가 기자클럽을 두고 직간접적으로 매스미디어를 장악했다는 지적으로 미루어 볼 때

(Pak외 2012, 135), 사회운동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은 정부의 그늘에서 전통적 매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여론 통제의 결과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폐쇄적이고 편향적인 일본의 미디어 환경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을 전후하여 바뀌기 시작했다. 기존 미디어에 의해 구축됐던 폐쇄적인 담론적 기회구조가 기존 미디어의 쇠퇴와 인터넷과 SNS 등 뉴 미디어의 확산을 계기로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두드러지게 진행되어 온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 매스미디어인 신문의 쇠퇴다. 일본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 1가구당 1.13부에 달했던 신문 구독 부수는 2008년에 1을 밑도는 0.98까지 떨어졌으며, 이후로도 하락세를 지속해 2013년 현재 0.86을 기록하고 있다.

TV의 경우 여전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연령대에 따라서는 매체 파워가 예전만 못한 실정이다. NHK방송문화연구소가 5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2010) 결과, 하루에 TV를 15분 이상 시청하는 이용자 비중(행위자율)은 2010년 현재 89%로 다양한 매체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신문의 행위자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다. 그러나 시계열상으로는 TV의 위상 역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 TV 행위자율은 1995년 92%에서 2000년 91%, 2005년 90%로, 매 조사 때마다 1% 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에 이르러서는 90% 선마저 붕괴됐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 젊은 세대의 행위자율이 80%를 밑돌고 있다.

TV와 신문 등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의 힘이 약화하는 것과는 반대로, 인터넷 이용은 최근 수 년 사이 빠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 NHK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행위자율은 2005년 당시 13%로 매체별 순위에서 5위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20%로 3위에 올랐다. 20대 젊은 세대의 행위자율은 32~33%로 5년 전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급상승했으며, 30대 역시 남자는 5년 전 18%에서 33%로, 여자는 17%에서 29%로 각각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반원전 시위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2011년을

전후해 급속도로 진전된 스마트폰 보급이다.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백서(2013)에 따르면 일본의 가구당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0년 9.7%에서 2011년 29.3%, 2012년 49.5%로 2011년 이후 급격히 신장했다.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은 사람들간의 소통 수단을 전통적인 1대 1 방식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보급에 따른 1대 다수, 또는 다수 대 다수의 방식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일본사회에서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들에 의한 사회운동 형성의 여건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로 종전의 TV, 라디오, 신문 등에 더해 인터넷이 부상하면서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정보량과 범위는 급팽창하고 있다.

이처럼 신문과 방송에만 의존했던 종전의 미디어 환경이 전 세대로의 인터넷 보급, 스마트폰 및 SNS이용 확산과 함께 빠르게 변모하면서 일본의 시민사회에 전에 없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진보 매체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 현장을 손쉽게 접하게 되고, UCC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매개로 반원전 메시지가 전국으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일본 시민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집단적 반발의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신문과 방송 등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받던 정보 대신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대량의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정부에게 불리한 정보나 정부가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기존 인쇄 매체나 TV 뉴스를 보지 않는 젊은 층에게 급속도로 확산됐다. 여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루머와 괴담도 다수 포함돼 있었겠지만, 정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고 이후의 막연한 불안감이 구체적인 형태의 정보로 제공되고, 온라인상에서 보장되는 익명성으로 인해 열띤 담론의 장이 열리면서 원전 반대 에너지는 급속도로 증폭됐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의 담론은 사회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그동안 꺼려졌던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그에 대한 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이나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뉴미

디어가 새로운 사회운동의 틀이 형성될 수 있는 열린 담론의 장으로 자리 매김된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급속도로 퍼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는 조직을 구심점으로 하지 않는, 전국 단위의 비조직화된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단위 시위대 동원의 기회를 제공했다(Olorunnisola 외 2012; Lester 외 2009). 과거 일본의 사회운동이 노조나 시민단체, 정당, 또는 정부나 정부와 협력하는 특정 조직의 주도 하에 전개됐다면, 2011년 이후에는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반원전 시위를 일으켰다. 이는 불특정 다수와의 실시간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정치적 세력과 연계되는 데 대해 큰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조직화된 네트워크 형성은 시민들이 정치적 부담 없이 시위에 동참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다.

반원전 시위의 형성 및 확산을 견인한 뉴 미디어의 역할은 시위 발생 초반인 2011년이나 한창 시위활동이 고조된 2012년 당시 시위 참가자들의 인터뷰나 시위 주도세력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가령 2011년 4월 이후 도쿄 젊은이들의 거리인 시부야와 하라주쿠 인근에서 매월 1,000명 규모로 탈원전 시위를 벌이는 ‘트윗노누크스(TwitNoNukes)’는 도쿄에 거주하는 평범한 개인인 히라노 타이치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 계기가 되어 형성된 모임이었다. “트위터에서 사람을 모아 시부야 인근에서 탈원전 시위를 할 때 참가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리트윗(Retweet) 해주세요”라는 그의 글은 조직에 속하지 않는 개인들을 시위에 동원하는 데 직접적인 동인이 됐다(박지환 2012b, 35-36). 같은 해 4월 11일 도쿄 고엔지에서 1만 5,000명 규모로 벌어진 ‘아마추어의 반란’ 주도 시위 역시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을 활용한 소수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 고엔지의 재활용품 점포망이자 인터넷 방송과 월간지 등을 발행하는 정치문화운동 네트워크인 ‘아마추어의 반란’을 운영하는 마쓰모토 하지메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 온라인 잡지 등 각종 채널을 동원해 4월10일 고엔지 시위 계획을 공지했

다. 시위 기획부터 실행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10일이다. 그렇게 전개된 고엔지 시위는 원전 반대보다는 사고에 대한 추도 분위기가 강하던 일본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대규모 시위로서 이후 여론의 흐름을 원전 반대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박지환 2012b, 39-41).

시위 규모가 수십 만 명으로 불어나면서 뒤늦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언론 매체들의 시위 관련 보도에서도 인터뷰에 응한 참가자들 대부분은 트위터나 지인의 페이스북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고 털어놓고 있다. 반원전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2년 5월 1일~7월 17일 사이 트위터에 “재가동 반대”라는 말을 포함하는 트윗은 60만 건에 달했으며, 7월 16일 열린 시위에 관한 트윗이 2만 건, 휴대전화나 PC로 트윗에 올라온 글을 읽은 사람은 116만 명에 달해 트위터가 시위 참가자를 동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日本經濟新聞 12/08/08).

시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 것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뿐만은 아니다. 시위에 대해 매스미디어의 보도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한된 대상에게나마 시위의 반원전 메시지와 참가자들의 모습을 전달한 것은 인디펜던트웹저널(IWJ) 등 독립적인 인터넷 매체들이었다. IWJ는 대지진 발생 이튿날인 2011년 3월12일에 경제산업성 앞에서 열린 소규모 반원전 시위를 시작으로 무수히 열린 반원전 시위의 모습을 인터넷 상으로 생중계하며 들끓기 시작하는 여론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野間 2012, 126-127).

이처럼 정보원으로서의 전통적 미디어의 지위가 약화하고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뉴 미디어의 보급·확산은 다양한 정보 제공과 다수의 개인들간에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폐쇄된 담론적 기회구조를 개방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결과, 원전 가동에 반대하는 담론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그렇게 증폭된 에너지는 ‘모이자’는 누군가의 메시지를 계기로 분출되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상호 소통을 통해 이뤄진 열린 담론의 결과로서 구현된 시위는 ‘조직’이 주도하는 반정

부 행동에 거부감을 갖는 일본의 일반 시민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

V. 결론

2014년 1월 24일, 국회 개회일인 이날 일본에서는 한달 전 국회를 통과한 특정비밀보호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도쿄에서는 3,000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정보 국가독점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의사당을 둘러쌌으며, 나고야 등 대도시에서도 수백에서 수천 명 단위의 반대시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일본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특별히 은닉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누설한 공무원을 엄벌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시위 활동은 2013년 10월 이후 각지에서 발생하기 시작, 같은 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시기를 전후하여 많게는 1만 명까지 규모가 확대되기도 했다.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법 철폐를 요구하는 크고 작은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예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거리로 나오고 있다. 2014년 4월 도쿄에서는 약 5,000명이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이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 불과 한달 전에는 원전 사고 3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모여든 3만 2,000명이 총리 관저와 국회 주변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일본은 더 이상 시위가 없는 사회가 아니다.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고 ‘시위하는 일본’이 부활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 본고에서 다룬 반원전 시위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일본 정가인 나가타초가 시위 인파로 가득 메워졌던 2012년 여름, 평론가들은 “1960년 안보투쟁 이후 52년간 근절됐던 시민의 데모의 부활”, “(노동조합이나 조직 동원이 없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데모”의 등장을 선언했다(野間 2012, 33).

반원전 이슈만 놓고 보면 시위의 규모는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위 약화라는 요인 외에도 여러 원인들이 지목된다. 시위 양식의 단조로움, 원전 가동이 불가피한 일본의 경제구조, 탈원전을 주장하는 영향력 있는 정당의 부재 등이 특히 2012년 총선거에서 원전 가동을 추진하는 자민당이 집권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일본 사회를 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꺾인 것도 사실이다.

그토록 힘을 받았던 일본의 반원전 시위가 뚜렷한 성과 없이 위축된 원인은 또 다른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시위의 급격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반원전 시위는 지속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규모 시위의 경험이란 지난 수십 년 동안 잠재됐던 일본 시민들의 정부 비판 능력과 행동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시위는 반원전 이슈에서 끝나지 않았다. 원전 이슈를 계기로 부활한 일본의 시위는 특정비밀보호법과 헌법 개정 등 새로운 이슈와 관련된 또 다른 시위를 낳음으로써 정부 정책에 순응적이던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는 연쇄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개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울려 퍼진 일본의 반원전 시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반원전 시위는 일본을 ‘시위 없는 사회’에서 시위가 열리는 정상적인 민주 사회로 돌려놓는 첫 걸음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큰 터닝 포인트가 됐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배경에는 폐쇄적인 매스미디어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개인들이 소통하고 스스로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매개가 된 뉴미디어의 부상이라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대규모 시위가 부활한 데 대해 경제 구조와 심리적 충격, 정부 레짐의 특성 등을 근거로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 역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뉴미디어가 제공한 열린 담론적 기회와 비조직적 네트워킹 능력이 없었다면 반원전 시위는 과거의 어느 시위들과 마찬가지로 금새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정 조직이 제한된 인적 동원력을 통해 시위를 이끌었다면, 미디

어 환경의 변화는 한 사람의 활동가가 매스미디어의 도움 없이도 전국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국으로 퍼뜨리고,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과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었던 시민들은 이제 시간이나 거리 제약 없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상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만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뉴미디어 발달이 자동적으로 시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의사 표현 욕구가 억눌렸던 일본과 같은 폐쇄적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사람들의 행동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미디어 환경과 사회운동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뤄졌으나, 본고는 폐쇄적 사회와 비정치적 시민이라는 특성을 갖는 일본에 초점을 맞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담론적 기회구조 변화와 비조직화된 네트워킹이 일본의 시위를 부활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몰고 온 시위의 부활과 새로운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은 앞으로도 어떠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인들을 거리로 불러모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위의 지속적 확산은 지금까지의 일본 정치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순응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폈던 일본 정부나 정치인들은 점차 커지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변화의 신호탄이 될 일본 반원전 시위는 앞으로 시위가 실패로 끝나고 중단되더라도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투 고 일 : 2014년05월21일]

[심사완료일 : 2014년08월11일]

[게재확정일 : 2014년08월20일]

참고문헌

- 마쓰이 다카시(Matsui, Takashi), 후지이 다케시 옮김(Translated by Fujii, Takeshi). 2012. “1960년대 일본에서의 사회운동-학생운동을 중심으로.”(1960 Nyendai Ilbon-eseoui Sahwe Undong - Hakseng Undong-ul Jungsim-uro) 『역사문제연구』(Yeoksa Munjae Yeungu) 28: 135-159.
- 박지환(Park, Ji-hwan). 2012a. “불안정과 재미의 정치: 2000년대 일본 사회운동과 탈원전 운동.”(Bulanjeung-gwa Jaemi-ui Jeongchi: 2000 Nyeundai Ilbon Sahwe Undong-gwa Tal Wonjeun Undong) 『인문과학연구』(Inmun Gwahak Yeungu) 35: 501-526.
- _____. 2012b.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사회운동-‘아마추어의 반란’의 탈원전 데모를 중심으로.”(Dongilbon Daejijin Ihu Ilbon-ui Sahwe Undong - ‘Amateur-ui Banran’-ui Tal Wonjeun Demo-rul Jungsim-uro) 『일본연구논집』(Ilbon Yongunonjib) 36(0): 31-55.
- 연합뉴스(Yonhap News). 2011. “세계 80여개국 동시다발 反월가 시위.”(Saegye 80yeo Gaeguk Dongshi Dabal Ban-Wallga Shiwi) 『연합뉴스』(Yonhap News). (10월 16일).
- 오현철(Oh, Hyeun-chul). 2004.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분석: 담론적 기회구조를 중심으로.”(Shimin Danchae-ui Seungseo Chamyeo Hwaldong-ul Jaeyak Hanun Yoin Bunseuk: Damronjeuk Gihwe Gujo-rul Jungsim-uro) 『한국정치학회보』(Hanguk Jeungchi Hakhoebo) 38(5): 105-123.
- 이시재(Lee, Si-jae). 1995. “현대일본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새로움’이란 무엇인가.”(Hyundai Ilbon-ui Saeroun Sahwe Undong-ui ‘Saeroum’-iran Muott-inga) 『경제와 사회』(Gyeongjae-wa Sahoe) 26: 208-226.
- 정진성(Jung, Jin-seung). 2001.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Hyundai Ilbon-ui Sahwe Undongron). 서울(Seoul): 나남출판(Nanam Chulpan).
- 한경구(Han, Gyeong-gu). 2000. “일본 시민사회의 성격.”(Ilbon Simin Sahoe-ui

Seungkyeuk) 『황해문화』(Hwanghe Munhwa) 28: 51-71.

한영혜(Han, Young-hae). 2004.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Ilbon-ui Jiyok Sahwe-wa Simin Undong). 서울(Seoul): 한올아카데미(Hanul Academy).

小林直毅(Kobayashi, Naoki). 2011. “メディア言説としての安定賃金闘争と水俣病事件.” (Media Gensetsu-to Siten Antei Chingin Tousou-to Minamatabyou Jiken).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Oohara Syakai Mondai Kenkyuujiyo Zassi) 630: 29-44.

野間易通(Noma, Yasumichi). 2012. 『金曜官邸前抗議』(Kinyou Kantei Mae Kougi). 東京(Tokyo): 河出書房新社(Kawade Shobou Shinsya).

日本経済新聞(Nihon Keizai Shinbun). 2012. “官邸前デモ、‘つぶやき60万’で膨張.” (Kantei Mae Demo, ‘Tsubuyaki 60man’-de Bouchou). 『日本経済新聞』(Nihon Keizai Shinbun). (8월 8일).

東洋経済(Toyou Keizai). 2011. “なぜ反原発運動は黙殺されてきたのかー偏見と無関心の厚い壁, 「柰」を壊し反転攻勢.” (Naze Han Genpatsu Undou-ha Mokusatsu Sarete Kitanoka - Henken-to Mukanshin-no Atsui Kabe, 「Waku」-wo Kowashi Hanten Kousei). 『東洋経済』(Toyou Keizai). (7월 14일).

_____. 2012. “反原発デモの効果、‘普通の人’が続々参加.” (Han Genpatsu Demo-no Kouka, ‘Hutsuu-no Hito’-ga Zokuzoku Sanka) 『東洋経済』(Toyou Keizai). (8월 16일).

埼玉新聞(Saitamashinbun). 2013. “‘人類と共存できぬ’脱原発訴え県民集会 3500人が参加.” (‘Jinrui-to Kyouzou Dekinu’ Datsu Genpatsu Uttae Kenmin Syukai 3500nin-ga Sanka) 『埼玉新聞』(Saitama Shinbun). (11월 25일).

上杉隆(Uesugi, Takashi). 2010. “なぜ日本人は、民主主義国家では日常茶飯事の「デモ」に消極的なのか.” (Naze Nihonjin-ha, Minshushugi Kokka-deha Nichijyou Sahanji-no 「Demo」-ni Syoukyokuteki Nanoka). 『週間ダイヤモンド』(Shuukan Diamond). (11월 18일).

工藤泰志(Kudo, Sasushi). 2011. “既存メディアが報じない新たな市民社会の胎動.” (Kizon

- Media-ga Houjinai Arata-na Shimin Syakai-no Taidou) 『週間ダイヤモンド』 (Shukan Diamond). (11월8일).
- 平林祐子(Hirabayashi, Yuko). 2011. “6・11脱原発デモ、48%が初参加 ネット・口コミ7割.” (6・11 Han Genpatsu Demo, 48%-ga Hatsu Sanka Net・Kuchi Komi 7 Wari) 『朝日新聞 Digital』(Asahi Shinbun Digital). (10월19일).
- Almeida, Paul, and Linda B. Sterns. 1998. “Political Opportunities and Local Grassroots Environmental Movements: The Case of Minamata,” *Social Problems* 45(1): 37-60.
- Bennett, W. Lance, Christian Breunig, and Terri Givens. 2008. “Communication and Political Mobilization: DigitalMedia and the Organization of Anti-Iraq WarDemonstrations in the U.S.,” *Political Communication* 25(3): 269-289.
- Bennett, W. Lance, and Alexandra Segerberg. 2012. “The Logic of Connective Action: Digital Media and the Personalization of Contentious Politics,”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15(5): 739-768.
- Boulianne, Shelley. 2009. “Does Internet Use Affect Engagement?A Meta-Analysis Research,” *Political Communication* 26(2): 193-211.
- Della Porta, Donatella, and Mario Diani. 2006. *Social Movements: An Introduction*.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Earl, Jennifer, and Katrina Kimport. 2011. *Digitally Enabled Social Change: Activism in the Internet Age*. Cambridge: The MIT Press.
- Gamson, William.1992. *Talking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dagdelen, Amac, WenyunZuo, Alexandra Gard-Murray, and Yaneer Bar-Yam. 2013. “An Exploration of Social Identity: The Geography and Politics of News-Sharing Communications in Twitter,” *Complexity* 19(2): 10-20.
- Hussain, Muzammil M, and Philip N. Howard. 2013. “What Best Explains Successful Protest Cascades? ICTs and the Fuzzy Causes of the Arab Spring,” *International*

- Studies Review* 15(1): 48-66.
- Jasper, James M, and Jane D. Poulson. 1995. "Recruiting Strangers and Friends-Moral Shocks and Social Networks in Animal Right and Anti-nuclear Protest." *Social Problems* 42(4): 493-512.
- Joppke, Christian. 1992. "Explaining Cross-National Variations of Two Anti-Nuclear Movements: A Political Process Perspective." *Sociology* 26(2): 311-331.
- Hagi, Kazuaki. 2012. "Anti-nuclear protests show Japan is becoming an ordinary nation, scholar says." *The Asahi Shimbun*. (7월19일).
- Kitschelt, Herbert P. 1986.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Political Protest: Anti-Nuclear Movement in Four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1): 57-85.
- Lester, Libby, and Brett Hutchins. 2009. "Power games: environmental protest, news media and the internet." *Media Culture Society* 31(4):579-595.
- Mercea, Dan. 2012. "Digital Prefigurative Participation: The Entwinement of Online Communication and Offline Participation in Protest Events." *New Media Society* 14(1): 153-169.
- Ogawa, Akihiro. 2013. "Young precariat at the forefront: anti-nuclear rallies in post-Fukushima Japan." *Inter-Asia Cultural Studies* 14(2): 317-326.
- Olorunnisola, Anthony A, and Brandie L. Martin. 2012. "Influences of media on social movements: Problematicizing hyperbolic inferences about impacts." *Telematics and Informatics* 30(3): 275-288.
- Pak, Hung Au, and Keiichi Kawai. 2012. "Media Capture and Information Monopolization in Japan." *The Japanese Economic Review* 63(1): 131-147.
- Shirky, Clay. 2008. *Here Comes Everybody-The Power of 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s*. New York: Penguin Books.
- Tarrow, Sidney G. 2011. *Power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illy, Charles, and Sidney Tarrow. 2007. *Contentious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통계자료

大原社会問題研究所 (Oohara Shakai Mondai Kenkyuuijo). “社会労働運動大年表.”(Shakai Roudou Undou Dainenpyou) <http://oohara.mt.tama.hosei.ac.jp>

日本新聞協会 (Nihon Shinbun Kyokai). “新聞の発行部数と世帯数の推移.”(Shinbun no Hakkou Busuu to Sedaisuu no Suui) <http://www.pressnet.or.jp>

総務省 (Soumushyou). “情報通信白書.”(Jyouhou Tsuushin Hakusho) <http://www.soumu.go.jp>

NHK放送文化研究所 (NHK Housou Bunka Kenkyuuijo). “2010年国民時間調査.”(2010 nen Kokumin Jikan Tyousa) <http://www.nhk.or.jp/bunken/>

Anti-nuclear Protests and Revival of Mass Demonstrations in Japan caused by the Changes of Media Environments

SHIN Kyoung Lip

This paper aims at finding out what caused the revival of mass demonstrations in Japan with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2011 as a momentum. This paper shows that it is the new media environment which acted as the main reason demonstrations in large scale revived in post-Fukushima Japan, a country where there had not been mass demonstrations since the 1960s and the 1970s when radical protests were more prominent. In the past, old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broadcast impeded spread of protests, forming negative discourse against social movements and blocking information on any movement itself. Since around 2011 when the anti-nuclear protests occurred, however, the digital devices such as smartphone have diffused rapidly in Japanese society and the use of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has expanded dramatically, connecting people and providing information across borders. This paper insists that the new media environment, new media replacing the roles of old media, has created discursive opportunities for social movements and mobilized tens of thousands of individuals without formal organizations. With digital media playing more important roles in spreading news and connecting people, and with many Japanese people coming out of the shells from the experience of mass anti-nuclear movement, now the Japanese do demonstrate. Japan

has started forming a culture of protests.

Keywords Anti-nuclear, Fukushima Nuclear disaster, Mass Demonstrations in Japan, Media Environment, Discursive Opportunities